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공동체 구축 방안

정부가 추진한 「21세기 경제장기구상」에는 모두 18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분야별로 참가하고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복지정책부문을 담당하였다. 본고는 「21세기 경제장기구상」 복지정책반에서 제시한 「21세기에 대비한 복지공동체 구축방안」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1. 복지 현황과 21세기 복지여건의 전망

□ 복지의 현위치

- 복지제도 정착기로의 진입
 - － 국민연금·의료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갖추었으며,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확대되는 등 복지제도의 정착기로 진입하고 있음.
-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복지수준
 - － 우리나라의 경제는 지난 30여 년간 연평균 8%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복지제도는 경제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총예산 대비 6.0%로 스웨덴(55.9%), 독일(48.2%), 일본(19.6%) 등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임.
- 복지정책의 낮은 우선순위
 - － 그간 경제성장 우선의 정책지향과 남북분단으로 인한 국방예산 확보 필요성 등의 요인으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뒤쳐져 있음.
- 국민 욕구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복지정책
 - － 일반 국민이 이용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

는 서비스와 급여도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적절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음.

□ 21세기의 생활과 『삶의 질』

- 생활의 고도화 및 다양화
 - 소득수준의 향상 및 분배구조의 개선으로 중산층 비율이 증가할 것임.
 - 국민 각 개인이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하고 개성적인 생활패턴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기대됨.
- 질 높은 삶의 추구
 - 21세기의 삶의 질은 ‘개인의 특성에 따른 다양화, 차별화’라는 개별성 및 다양성 존중의 관점에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삶의 질 추구를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수하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개별적 욕구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하고 다원적인 접근이 필요함.

□ 복지수요의 전망

- 복지수요의 총량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에서 다양한 형태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대두될 것임.
 - 노령층(2000년 65세 이상 6.8%)의 증가에 따라 의료보장, 연금, 공공부조 등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임.
 - 소가족화 또는 핵가족화의 가속화로 인한 가족내의 노인부양, 자녀양육 기능의 축소로 이의 대체를 필요로 하는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임.
 - 국제화·개방화에 따라 청소년 비행, 특히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정신질환의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가 예상됨.
 - 시장경제로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한다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드러났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복지비전 2020과 새로운 복지정책

□ 복지비전 2020 -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는 사회

- 조화로운 복지국가(Harmonized Welfare State)
 - 자유와 평등의 이념적 조화를 통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모색하고, 선진경험의 장점과 우리 사회의 전통을 융화시킴으로써 한국인의 『삶의 질』을 극대화하게 됨.

- 시장이념과 탈시장이념의 조화
 - 효율과 자조를 강조하는 시장이념과 형평과 공동체라는 탈시장이념간의 조화를 이룩함.
- 경제성장과 분배정의의 합의점 추구
 - 사회복지를 경제수준에 맞도록 확대하되, 경제성장 및 안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함.
- 세계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의 조화
 - 서구 복지국가의 교훈과 장점을 수용함과 동시에 우리의 고유한 사회문화에 기반한 관련 제도를 개발·발전시켜 한국의 사회현실에 적합한 복지모형을 구축함.

□ 새로운 복지정책의 모색

〈기본시각〉

- 21세기는 한민족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기회가 될 것임.
 - 냉전종식과 더불어 재편되는 새로운 세계질서 속에서 세계사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세계속의 한민족 공동체를 지향해 나갈 것임.
- 경제적 측면에서의 선진국권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
 -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중요한 국가발전의 목표가 됨.
- 공공부조·사회보험·사회복지서비스의 세 축이 상호연계적, 동태적으로 융화·확산되는 모습으로 변화하면서 그 영역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여 나갈 것임.
 - 공공부조는 능동적으로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생동적인 모습으로, 사회보험은 연계적, 통일적, 공조적인 모습으로,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원적, 보편적, 종합적인 모습으로 변화될 것임.

〈추진방향〉

- 복지영역의 확대
 - 경제개발 초기에는 생리적 욕구의 충족이 복지의 주요 영역이었지만 21세기에는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뿐만 아니라, 안전·여가·문화에 대한 욕구 등 국민의 복지욕구가 다양화 될 것임으로 복지제도 및 서비스도 이에 부응하여 개발되어야 할 것임.
- 일반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확대
 -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와 함께 일반국민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정

책을 개발하며, 개호서비스를 도입하고 예방적 서비스를 확대함.

- 총합적인 지역복지체계의 구축
 -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지역복지공동체를 이룩함.
- 생산적 복지의 추구
 -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이 상충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많은 단순 구호차원의 ‘소비적 복지정책’을 지양하고, 경제성장과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생산적·예방적 복지정책’을 지향함.
- 복지주체의 다원화: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 각 개인이 직면한 과제를 자신이 해결하고(자조),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 욕구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며(公助), 나아가 지역활동 및 자원활동을 통한 사회적 도움을 지원하는 것(共助)에 의해 사람들의 자기문제 해결능력을 높여 자립하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3. 안정된 삶을 위한 소득보장의 실현

□ 소득보장부문의 장기전망

- 노령화, 소자녀사회의 본격적 도래와 고령자·여성의 취업기회 증대
 - 노령화 및 저출산으로 노동력인구가 감소하여 노동시장의 활력저하가 우려되는 반면 고령자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넓어져 소득획득의 가능성이 커질 것임.
- 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취업정보의 확산 및 자산조사의 정확성 제고
 - 취업정보가 확산되어 노동수급의 효율성이 증대함으로써 소득중단·상실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가능성이 커지며, 고령자·여성·장애인 등이 각각의 능력·적성·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취업할 수 있을 것임.
 - 정보화는 전세계를 지구촌화하여 국가간 인력이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른 자국민의 사회보장과 자국의 불이익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상이 쌍무적 혹은 다자간으로 진행될 것임.

□ 소득보장정책의 기본방향

- 고용안전망의 구축에 의한 사회적 활력의 유지
 - 일차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개개

인의 소득활동에 의한 사회적 활력을 유지함.

- 사회보험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의 1차 안전망 구축
 - 전국민에 대한 소득보장은 기초적인 적정수준으로 보장하되, 그 이상은 부가적, 보충적 제도에 의함.
- 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의 2차 안전망 구축
 - 사회보험에 의한 1차 안전망에 의해서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은 2차 안전망에 의해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을 보장함.
- 정부-기업-개인에 의한 삼층적 소득보장체계의 정립
 - 국가는 기초적인 적정생활수준을 보장하고, 기업(직역)-개인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각종 세제·금융 등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부가적·보충적 급여가 보장되는 삼층적 소득보장체계가 확보됨.

□ 추진방안

〈장기정책과제〉

- 전국민 소득보장시대의 정착
 - 소득보장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기초보장으로서의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사회보험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에 대해 공공부조에 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함.
 - 1988년 전국민연금 확대시 국민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각출연금(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연금분할제도의 도입을 강구함.
- 제도간 연계의 강화와 재정건실성 확보
 - 제도간 급여가 수혜자중심의 정보망으로 구축·연계되어 급여 중복 및 누락을 방지함으로써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의 통합을 추진함.
 - 후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의 경제적 왜곡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적자위기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도록 재정건실화 방안을 강구함.
- 개인과 가족, 공공과 민간, 사회보장정책과 조세정책간 조화
 - 가족통합에 대한 장려책으로서, 가족구성에 따른 생활비 소요를 반영하는 포괄적 소득보장정책을 발전시켜 나아감.
 - 개인·가족 및 기업에 의한 소득보장 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적 소득보장제도

를 발전시킴.

-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조세제도 3자간의 소득보장을 위한 역할분담과 종합적 연계를 이룸.
- 통일에 대비한 소득보장방안 마련과 국제간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 남북통일시 예상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내의 완충장치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국제간 노동력 이동에 따른 연금수급권 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국제간 협정의 체결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

〈중·단기정책과제〉

- 빈곤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득보장의 추진
 - 현재 최저생계비의 80%(자가소득 포함)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생계보호수준을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여 1998년에는 완전한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함.
- 자립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 자활대상자들의 자영창업, 취업, 생산·신용협동조합의 조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체계적이며 통합된 프로그램을 제공함.
- 소득보장의 국민적 연대 실현
 - 도시자영자·일용직·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에게 국민연금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1998년까지 전국민연금화를 이룩함.
 - 산재보험은 1999년 5인 미만 및 사무금융업종까지 확대하고, 고용보험은 2000년까지 5인 사업장까지 확대함.
 -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는 집단과 소득보장제도의 확대과정에서 적용 제외되고 있는 계층, 여성에 대한 소득보장권을 확보하도록 함.
-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안정방안 강구
 - 연금급여수준을 각출제 원칙에 근거하여 조정하고, 평균수명연장에 따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조정하도록 함.
 - 계속 적립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함.
- 안정된 취업을 위한 고용보장의 강화
 - 고용보험제도를 실업의 예방, 인력수급의 원활화, 고용구조의 개선, 직업훈련의 활

성화 등 적극적 인력정책과 연계함.

4.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보장의 내실화

□ 보건의료부문의 장기전망

- 건강수준의 향상
 -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00년에는 74세, 2020년경에는 77세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아사망률은 2000년에는 1,000명당 10 수준으로, 2020년에는 7 이하로 감소하여 선진국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됨.
- 질병구조의 변화
 - 암이나 순환기계 질환 등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조기진단과 치료법의 향상으로 증가추세는 둔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통사고나 산업장사고로 인한 사망과 알코올·약물남용으로 인한 중독사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의료기술의 발전
 - 첨단과학기술의 의학분야 적용으로 하이테크에 의존하는 의료의 가속화될 것이며, 유전공학을 이용한 진단방법의 개발과 유전인자 조작으로 선천성질환의 치료가 가능해질 것임.
- 소비자 주도의 의료서비스 조직
 - 공급자 주도로 형성되어 왔던 의료서비스 조직은 환자의 수요와 취향에 따라 소비자 주도로 변모하게 될 것임. 또한 의료서비스의 장은 입원에서 외래, 외래에서 다시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변화할 것임.

□ 보건의료정책의 기본방향

-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속적 제공
 -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건강증진, 재활 등 포괄적인 서비스가 적절하고 균형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확립
 - 계층에 구애받음 없이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원부담의 형평성도 증진시켜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완비함.

□ 추진방안

〈장기정책과제〉

- 보건과학의 진흥과 첨단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발
 - － 생명공학, 의공학, 의료정보, 신약개발 등에 관련된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며, 현재의 공공 보건의료연구기관을 발전적으로 개편함.
 - － 초고속공중정보통신망이 2015년에 일반가정까지 공급되는 것과 더불어 재택진료의 도입을 추진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 각종 만성퇴행성질환의 임종단계 환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호스피스사업을 도입하며, 요양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각종 자원과 지속적인 환류체계를 구축함.
- ‘건강보험’ 개념의 도입
 - － 건강관리의 패턴이 예방 및 적극적인 건강증진의 추구로 변화함에 따라 의료보험(medical insurance)도 보다 포괄적이고 능동적인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의 개념으로 확대함.
- 노인의료비 부담의 효율적 대처
 - － 간호양로원, 재택진료 등 노인보건의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충될 것이므로 이들에 대한 보험수가를 개발하여 보험급여화하는 한편 재정부담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조합간 재정조정을 강화함.

〈중·단기정책과제〉

- 의료공급의 구조조정(1차 의료기능의 획기적 강화)
 - － 1차 의료기관(‘동네병원’) 인력·시설·장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집단개원제도’와 ‘개방형 병원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별로 ‘종합검사센터’를 설립함.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
 - － 공공 및 민간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범국민적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이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기구구성 운영, 교육홍보자료의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함.
 - － 보건교육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공공 및 민간조직의 보건교육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며 일선 보건요원을 활용한 보건교육을 강화함.

- 의료보험제도의 성숙화
 - 보험급여 기간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재정공동사업을 통하여 전조함으로 확대하고, 국민들의 한방수요에 부응하도록 한방의료보험의 급여 범위를 확대함.
 - 진료비 지불방식을 서비스 항목별 가격체제(‘행위별 수가제’)에서 질병단위별 가격체제(‘포괄수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의료보호사업의 확대와 질적 개선
 -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의료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의료보험 급여대상 항목을 의료보호에도 동시에 적용함.
- 재정안정사업의 강화
 - 조합재정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국고차등지원과 조합간 재정조정을 공정하게 실시함.
 - 국고차등지원은 조합간 재정조정사업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운용함.

5.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서비스 확충

□ 복지서비스부문의 장기전망

- 복지수요의 다양화
 - 인구의 고령화, 가족기능의 변화, 국제화 및 개방화, 소득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새로운 복지요구가 생겨나게 됨.
- 조화로운 복지사회의 실현
 - 경제적 풍요로움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감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편안한 사회가 될 것임.
 - 사회복지의 개념도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보장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의 보장으로 확대되며,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풍요롭고 편안한 사회가 될 것임.

□ 복지서비스정책의 기본방향

- 보편적 복지·예방적 복지·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족-이웃-지역사회-국가’로 이어지는 복지공동체를 이룩함.
 - 생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원을 통하여 적정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자활·자립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 추진방안

〈장기정책과제〉

-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 현재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되어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의 기능을 중산층을 포함한 일반가정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제공되도록 함.
 - 지역사회를 혈연을 넘어서는 확대된 의미에서의 가족 즉, ‘지역사회가족’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요보호자를 지역사회가족에게 위탁보호(foster care)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함.
- 가족부양수당제도의 도입
 -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가정에서 계속 보호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제도로써 가족부양수당을 제공하고,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간병인 수당도 지급함.
- 학교사회사업의 도입 및 확대
 -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가정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동 및 청소년문제의 예방을 위해 학교사회사업을 도입함.
- 인구 구조의 노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의 확충
 - 노인질환의 특성에 맞는 예방적 보건서비스와 병행하여 장기요양중심의 노인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발하며, 보건과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강화함.
- 공공과 민간의 연대에 의한 육아 및 가족부양 서비스의 충실
 - 여성의 역할 변화에 대한 사회지원서비스로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육아 및 가족부양서비스를 확대하며, 공적서비스를 보완하는 실버산업이나 자원봉사를 활성화함.

〈중·단기정책과제〉

- 가족 및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
 -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을 확대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확충하며, 노부모·장애인·요보호아동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주택분양권을 우선 부여함.
 - 시·도 및 시·군·구에 다원화되어 있는 각종 상담의 연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

적인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함.

-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의 확충
 - 고령자 적합직종(20개) 및 고용기준(3%)을 국·공립기관부터 의무화하며, 고령자 취업알선기관을 단계적으로 확충함.
 - 퇴직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계속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보건소에 인력과 물리치료실 등의 장비를 보강하여 노인성질환 1차 진료기관으로 육성함.
 - ‘노인종합복지센터’모형을 개발한 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함.
-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사회참여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법을 제정해 현재 각종 법령상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부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시·도별로 순회개최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및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함.
 -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의무고용 대상사업체의 범위도 확대함.
 - 내부장애와 정신장애를 장애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모색함.
- 아동복지의 강화
 -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환경의 요보호아동은 그룹홈의 형태에서 성인의 보호하에 양육될 수 있도록 하며,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함.
-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운영 개선
 - 사회복지수용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시설의 자부담을 폐지하며, 수용자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시설의 종류, 규모,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함.
 - 무허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정부지원 방안을 모색함.

6. 사회안전망의 확보를 위한 복지공동체 구축

□ 복지지출규모의 확대

- 복지지출규모의 현황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규모는 1994년 기준으로 GDP의 3.7% 수준임.

- 공적부조부문의 국고비 대 지방비 비율은 77:23, 복지서비스부문의 분담비율은 55:45의 수준으로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재정의 확충
 -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여 증진되기 위해서는 복지재정지출 증가율을 일반예산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책정하여 나가야 할 것임.
- 복지수요증진에 대응하는 조세부담률 증진
 - 증대하는 복지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낮은 조세부담률을 적절한 수준까지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세무행정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탈루된 세원을 발굴하며, 국세전산망의 구축을 통해 세무행정을 과학화함.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복지전달체계의 전문화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확립
 - 보건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연구 개발하여 보건복지사무소의 모형을 개발함.
 - 범국가차원에서의 보건 및 복지부문 정보체계의 확립이 요구되므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관리 및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회복지 전산망을 구축함.
- 사회보험제도간의 연계 강화
 -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급여, 지역연금의 노령연금급여와 장애·유족급여의 연계를 통하여 중복급여를 배제함.
 - 모든 의료보장관련 급여는 일단 의료보험에 의하여 지급하고, 업무상 재해일 경우에는 의료비의 전액을 의료보험이 산재보험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제도를 조정하여 요양급여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함.
 - 노령급여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에 의한 급여를 수급할 경우 고용보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며, 퇴직금·국민연금·고용보험을 연계하는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
- 사회보험 관리운영체계의 효율화
 - 모든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기준은 하나로 통일시켜 계산 및 부과의 편리성을 도모함.

- 개별 보험의 운영 효율성, 신축성 제고, 보험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자격관리, 징수기준부터 제도간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급여부문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가입자 및 수급자의 정보관리를 위한 사회보험카드제도의 도입을 고려함.
- 복지전산망의 구축과 복지정보 카드화 추진
 - 보건·복지부문의 정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전산망을 통해 이용자인 주민의 욕구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질적 수준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
 - 복지정보 카드를 활용해 공공부조·사회보험의 수급을 보다 용이하게 하며, 각종 복지욕구를 입력하여 복지서비스 수급에 활용함.

□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 민간복지 투자의 여건 조성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기업 기부금의 면세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공동모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인의 공동모금에 대해 전액 면세함.
 - 개인소득자의 사회복지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의 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간편화함.
- 공동모금제도의 도입
 - 중앙과 지방에 공동모금회를 별도의 기구로 설립하여 민간복지 운동이 민간 스스로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
 - 관련법을 제정해 공동모금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모금 및 분배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민간복지 투자의 투명성을 확보함.
-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단위에서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체계화함.
 - 자원봉사 보험제도, 자원봉사 저축제도 등을 도입하고, 자원봉사 대축제 등을 개최하는 등 지원제도를 확충함으로써 국민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함.